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 수용… “與野 관계없이 수사하자”

정청래 “2차 종합특검법 추진
통일교 특검 못 받을 것도 없어”

김병기 “민주당, 회피한 것 아냐
특검 안 받을 거라 착각한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통일교가 얼마나 연루됐는지, 여야 관계없이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뿐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서면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사건의 핵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특검은 양평고속도로·공천비리·윤석열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의 혐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내란특검은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을 누가 불러줬고, 누가 최초 기록했는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합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역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종합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 통일교 특검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발언을 이어받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정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됐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가 무겁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 청탁을 넘어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이)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됐으니 (특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하는 모양이다.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정교유착으로 불법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보자”고 역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되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한다”며 “오늘 오전이라도 만나자.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도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으니, 송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명분도 사라졌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끝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주당,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 고발·국정조사 등으로 압박

오는 30~31일 이틀간 진행 예정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등 참석
“김범석 참석 강행할 수단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쿠팡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위, 기후에너지환경노위, 기재위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며 “과방위원장이 주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 의원은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6명, 타 위원회에서 2명씩 구성한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기타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안상 일정은 12월30~31일”이라고 했다.

청문회 일정은 최소 7일 가량 소요되는 증인 채택 절차 등을 고려했다. 또 김범석 의장 등이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해진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동행명령장을 통해 참석을 강행할 수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택배서비스 사업자 등록은 생활물류법 적용을 받는 국토위 주관”이라며 “시행 규칙에 따르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미충족 시에는 보완 요구 가능하고 안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쿠팡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는 물론 한국 본사에 100명 넘는 인력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폴필먼트서비스에 조사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표면적으로 물류 회사인 쿠팡폴필먼트서비스다. 하지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해 ‘채계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사4국과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조사 대상은 쿠팡 본사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쿠팡 미국 본사와 한국 본사, 계열사 간의 자금 흐름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금융파터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Tuesday

Wednesday

Thursday

2

3

4

9

11

16

18

23

24

25

KB손해보험이 지키는 1년 365일 든든한 일상!

일상을 지키는 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